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수사의뢰 검토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진상조사단이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해 경찰에 정식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당원 관리 책임자의 PC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 관리당원 개개인에게 발송한 실명 문자메시지의 발송처와 발송자, 비용 부담자, 명단 유출 범위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시당은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만인 지난 10일, 대신 당시 광주시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김철수 변호사를 단장으로, 김나운 변호사, 김병현 디지털소통위원장, 이재종 정책미디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3주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당원관리 책임자인 시당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 시당 조직국장,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회 당원관리 책임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를 펴왔다. 당원 개개인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입당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당원 명부가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정황과 발원 등이 있었다"며 "다만, 정당에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의뢰해 실제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밀을 원칙으로 해야 할 당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적 대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또 31일 이형석 시당 위원장 주재로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다음달 2일 상무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도 "온라인을 포함해 신규 관리당원의 명부를 조직국에서 취합한 후 엑셀파일로 입력 관리하고, 복사할 경우에도 중앙당 승인을 거쳐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유출 의혹이 불거진 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벌백계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중앙당은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철저한 당원 명부 관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 수사는 광주시당 당원관리 책임자 등이 실제 사용한 PC나 당내 경선 투표권을 쥐고 있는 관리당원 명부가 담긴 USB를 제출받은 뒤 포렌식 방식을 통해 명단 유출 흔적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3주간 진상조사 "의구심 충분, 수사 불가피" 당원 관리책임자 PC 포렌식 조사 이뤄질 듯 실명 문자 발송처·발송자·비용 규명 관건

불과 2~3개월 전 가입한 신규 관리당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문자발송 장소는 어디고, 문자발송료는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주요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

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일부 당원들의 피해 사례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불인된 당원관리 PC 등이 제출되는 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

혹은 광주시장 출마예정자인 A씨 측이 연초에 신년인사를 겸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글머리에 수신자 개개인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적지 않고 경쟁후보자의 처 조카나 경쟁 후보자 최측근의 대학생 자녀 등 신규 관리당원 상당수가 동시다발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이 추미에 당 대표 지시로 긴급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광주시당은 법률가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인호 기자



이이스다이빙 훈련 30일 오전 한강특성지구 수상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가 강 결빙 시 빙산인명구조 및 얼음 밀 상황에 대비한 이이스다이빙 훈련을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현수막 내건 공무원노조 간부들 '선고유예'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린 뒤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30일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시청과 일선 5개 구청 외벽에 내건 혐의(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A씨 등 6명에 대해 각각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뒤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행위는 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수단이며 불법"이라며 "공무원노조법에도 노조의 활동 범위를 임금이나 복지,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

다.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수막 게시 당시 상황, 위반 횟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최초로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법(공무원의 집단행동)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조 간부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현수막을 내건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동에서 요구하는 위력(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다.

다만, 이들 중 6명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이들은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2016년 3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노조 간부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파속 아파트 복도에 신생아유기

조강력 한파 속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7분께 광주 북구 무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서 탯줄이 달린 여자 신생아가 울고 있는 것을 주민 A(27·여)씨가 발견해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4시께 신생아를 발견한 A씨는 보은조치한 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의 기온은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119는 신생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기 전후 시간대 CCTV 영상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수익 미끼 P2P 대출 사기 50대 구속

고수익을 미끼로 P2P(Peer-to-Peer) 대출에 투자를 유도해 수 억원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P2P 대출 투자를 유도해 중간에서 수 억원의 돈을 가로챈 대출업체 대표 A씨(5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4회에 걸쳐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1인당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128명으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이다.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뒤 적정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은 울산 중구 학산동과 성안동 등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된다", "연 18%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건물을 담보로 2순위 신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속였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해당 투자상품은 어떠한 담보도 설정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의 돈은 A씨 차명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사촌 동생 흥기로 찌른 30대 '목비권'

사촌 동생과 다다 흥기로 수차례 찌른 3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정모(35)씨를 긴급체포 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남원시 쌍교동 A(31)씨의 집에서 A씨의 등을 흥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흥기를 휘두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적자인 정씨는 변호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변호사가 도착해야 정식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찌른 점을 감안하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비 붙은 男 잔인하게 폭행 30대 징역 4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깨진 술병으로 잔인하게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깨진 술병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

